산업부 "수출 확대 위해 소부장 등 공급망 안정화 선행돼야"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안덕근 장관 "중간재 수입하는 구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 요소 수입 차액 보조 등 안정화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우리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합동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흑연·무수불산과 같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소와 같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이나,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광물 등은공공 비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재자원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자원을 순환 생산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산업부, 3분기 중 기업 현장애로 36건 해결

'산업부 기업동향대응반' 운영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소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동향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90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 이 가운데 36건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을 통해 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0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410회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건의 사항은 총 90건(정책건의 30건, 규제개선 24건, 재정·세제 20건, 행정지원 16건)으로 관계기관 검토·협의를 통해 'K-조선 초격차 비전 2030 수립',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 '산업단지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 허용',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 마련' 등 3분기 중 총 36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디지털육종' 연구개발 박차

송미령 장관, '국제종자박람회'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세계 종자(씨앗)시장 공략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6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종가가공처리센터 등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8회째를 맞은 국제종자박람회는 농식품부, 전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다.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립종자원은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통령상에 ㈜시드피아의 벼 '골든퀸3호'를 선정했다. 또 국무총리상에 ㈜농우바이오의 고추 '엔더블유골든'과 배추 '겨울왕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인세티아 '플레임' 등 5점을 선정했다.

벼 '골든퀸3호'는 민간 최초로 개발한 향이 나는 품종으로서 상업화에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배추 '겨울왕국'은 월동 조생배추의 시장점유율 66%를 차지하는 품종으로 농가 및 유통상인의 만족도가 높은 품종으로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김장철 맞아 배추·무 등 비축물량 푼다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농수산물 수급 전망·대응 등 논의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품목별 비상수급대책 마련에 나선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계약재배·비축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후 박범수 차관 주재로 김장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에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 및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추·무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 늘어나고 다음 달부터는 가을배추·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돼 김장철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 여건 등으로 일시적 공급량 불균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 및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고춧가루·마늘·양파·대파·쪽파·생강 등 양념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쪽파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산지인 충남 홍성·아산 지역 생육이 회복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국내 한 대형마트에 무·배추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배는 추석 이후 지속된 폭염과 9월 하순 집중호우로 햇볕 데임 및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철에는 갈아서 사용하는 특성상 퓨레 등 가공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등 수산물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를 통한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각 품목별로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적발

207억 중 20% 넘는 42억 부실집행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A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 2593만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B지방자치단체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 협의회 심의·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도,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